

8+8.65 생산량 보전 위해 더 고되게 임금 까이면서 일하라고? 양보안 부결시키고 투쟁을 이어가자!

김성락 집행부가 UPH-UP, 잔업 연장, 중식시간·휴일 축소, 임금 삭감, 신입사원 임금차별 확대 등을 담은 8+8 양보안에 잠정합의를 했다. 정확히 말하면 8+8이 아니라 8+8.65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8+8" 쟁취를 바랐다. 잔업·특근 거부 투쟁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력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세력을 포함해 모든 의견그룹이 지지를 보였다.

4월 15~16일 현장 활동가들이 교섭장 앞에서 투쟁을 벌인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김성락 지부장은 양보교섭 반대, '온전한 8+8' 쟁취를 위해 교섭장 항의 농성을 한 활동가들을 '정쟁'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매도하며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컨베이어 조합원'을 위한 안을 합의하려는데 왜 봉쇄를 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작 나온 합의안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집행부는 사측이 강요한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3무 원칙을 내팽개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배신적 타협을 했다.

그런데도 김성락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을 현대차의 8+8 시행안, 지난해 6월 3일 사측이 제시했던 안과 비교하며 진전을 이룬 양 홍보하고 있다. 집행부가 도저히 듣기 거부할 정도로 '자화자찬'을 하며 억지 주장을 펴는 데는 나름의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첫째: 현대차나 23대 집행부와 비교하면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3무 원칙과 온전한 8+8 쟁취'는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3대 집행부의 안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므로 이를 핑계 삼을 수 없다. 현대차 조합원들도 잘못된 합의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특근 수당 삭감 등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진지하게 투쟁을 확대하지도 않아 놓고, 애초

무리한 요구였다고 돌려대는 것은 조합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3만5천 기아차지부의 힘으로 단호하게 싸운다면, 양보는 결코 불가피한 게 아니다.

집행부만 올라가면

둘째: 현장 반발과 비판을 '집행 권력 욕심에 정쟁하는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기 위한 알팍한 술책이다.

하지만 3무 원칙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중 하나다. 김성락 집행부 자신이 "온전한 8+8"을 약속하기도 했다. 벌써 이를 잊은 것인가?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금속회 활동가들은 현장에 있을 때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던 것을 다 잊었는가?

지금 공장 부문 노동자들은 집행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분노를 모아 집행부의 양보안을 부결시키자. 조합원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주자.

좌파적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집행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부결 선동을 넘어 투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조합원들의 분노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잠정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김성락 집행부가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중단한 것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부결 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양보교섭 시도에 반대해 교섭장 앞에서 시위한 활동가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합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비·판매 조합원들에게 공장 부문 조합원들의 실상을 잘 알리고 설득해 부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수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뻐하고 있는 지금이 투쟁을 밀어붙일 기회다. 이런 기회를 살려 노동시간 단축(온전한 8+8 쟁취) 투쟁을 이어간다면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으로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투쟁을 이어가자!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세찬 폭우도 진실 규명을 향한 염원이 모여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만 2천 명은 한 마음으로 "기억하자! 행동하자!"를 외쳤다.

정부의 집요한 공격과 주류 언론들의 무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지 다시금 확인시켰다. 특히, 진실 은폐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총선에서 패배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참가자들의 구호와 무대에 오른 연설자들의 주장에는 힘이 넘쳤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당, 국민의당 대표들은 역시나 세월호 2주기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6월 말이면 종료되는 세월호 특조위 지속(특별법 개정)을 위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저항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416연대는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맞서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자.

잠정합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락 집행부의 자화자찬	잠정합의안의 실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UPH UP으로 노동강도 "최소화" • 휴일과 조합활동 시간 축소 "최소화" • 12월 31일 2조 4시간 조기퇴근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아니라 8+8.65 • 휴식시간 없는 잔업 30분 연장 • 2조 중식 축소, 단협 개악 • 노동강도 강화 • 일반직 법정노동시간 연장 • 임금 약 4만 원 삭감 • 신입사원 심야보전수당2 또 미지급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의 전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민영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심판하자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정부·여당을 보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최대치 목표를 1백80석 달성으로 잡았다. 이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는 지난 총선에 비해 2백만 표나 줄었다. 새누리당의 절대 아성으로 불리던 강남, 분당, 영남도 흔들렸다. 철옹성 같던 박근혜의 기반에 틈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주로 박근혜 정부의 우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 가계 부채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득 불평등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노동자·서민의 불만이 광범하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반감도 크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반사이익을 거뒀다. 더민주당은 제1당이 되기는 했지만 정당 득표 수는 2012년보다 1백70만 표가량 줄었다. 안철수는 '보수적 중도층'을 공략해 제3당에 올랐지만, 수도권에서는 달랑 2석만 얻었다.

박근혜의 총선 패배는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박근혜는 노동개혁 추진을 멈추지 않겠지만, 이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우리가 단호하게 맞선다면, 노동법 개혁과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의 현장 적용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울산·창원 등 진보·좌파 후보 8명 당선!

금속노조의 저력을 확인하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좌파는 사표 논리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새누리당이 대승할지 모른다는 커다란 위기감 때문에 진보·좌파 정당들이 크게 압착을 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진영은 모두 8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이 6석을, 울산연합 계열(무소속)이 2석을 얻었다. 기아차 화성공장이 있는 화성시갑에서도 홍성규 후보가 8.17퍼센트의 꺾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6곳 중 3곳에서 민주노총 후보가 당선됐다. 창원 성산, 울산 북구, 울산 동구.

민주노총은 총선공투본을 구성해 중요한 선거구에서 노동자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노동자 후보 대 자본가 후보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계급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기세에 눌러 이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조차 '노동개혁' 반대를 말할 지

경이었다.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의 등뼈는 모두 금속노조였다. 울산 북구와 동구는 각각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축이었고, 창원과 경주도 각각 금속노조 경남·경주 지회가 뒷받침했다.

금속노조의 지적처럼, 금속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저력을 증명"했다. '조직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보기 좋게 반박당한 것이다.

임시국회 노동개혁 처리 비상!

박근혜의 패배를 투쟁 확대의 기회로 삼자

선거 패배로 박근혜의 각종 개혁 계획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은 선부르다. 박근혜는 뻔뻔하게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노동개혁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총선에서 확인한 "민의를"는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가·보수 우파를 결집할 '강한' 정부였던 것이다. 정부의 노림수가 분명한데도, 더민주

당과 국민의당은 20대 새 국회 전에 4월 20일부터 한 달간 (여당이 다수의석인) 19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미 이들은 통상임금 억제, 법정 노동시간 연장 등에서 정부·여당과 어느 정도 타협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파견 확대에 관해서도 "노사정위 복원해 논의하자"고 했고, 안철수는 파견법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계급적 성격을 봤을 때, 이들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혁은커녕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협상을 강행했다.

진정한 변화는 자본주의 야당들로부터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새누리당에 힘 실어 준 광주지회 집행부 규탄한다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집행부가 지난 4월 8일 반(反)노동자 정당인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100만대 공장 증설'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치며 총선 투쟁을 벌이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서민이 새누리당에 불만을 터뜨린 바로 그 총선 시기에 말이다! 이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소식을 뺑뺑 띄우며 '기아차 노조와의 협력' 약속

속을 선거에 활용했다.

광주지회 집행부는 '100만대 공장 증설'에 눈이 멀어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준 꼴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고, 실용주의적으로 노동대중의 염원을 저버린 철딱서니 없는 짓이다.

이 소식을 옥중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접했다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3년간 박근혜와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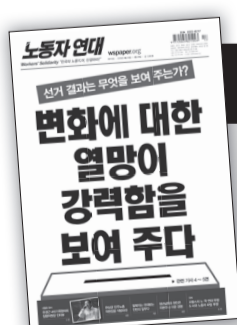
누리당의 노동자 공격은 악독했다. 80만 민주노총의 수장 한상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기아차지부 비정규직 한규엽, 최정명 동지는 1년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락 집행부는 지금 또다시 노동개혁 추진에 나선 새누리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역을 한 광주지회 집행부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